

묘포시설의 근대화와 借地양묘의 문제점

농림신문社編輯部提供

현재 산림묘포의 연간 소요면적은 약 2천여 정보에 달한다. 이 중 영림서에서 국영양묘를 하는 일부 묘포를 제외하고는 민영양묘의 경우 생산자들이 자가포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포지를 남의 논밭을 빌려서 양묘하는 실정이다.

남의 논밭을 빌려 양묘할 경우는 차지료를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차지료(借地料)가 엄청나게 비싸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묘목의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할지라도 평균 전체묘목 생산비의 14%를 점하고 있고 또 묘목생산비중 직접생산비 즉 묘목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제재료비, 차지료만 계산할 경우 전체생산비의 18%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 묘목생산비에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차지료는 지방에 따라 다소차이는 있다할지라도 전국 평균을 보면 2백평 1두락당 쌀 2가마, 보리 1가마로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4~5백원에 차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렇게 차지료 자체가 비싸냐고 하는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양묘를 할 포지는 물을 대면 논이 될 수 있고 물을 빼면 밭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이모작 이상이 가능한 상답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비쌀수 밖에 없다.

오늘날 산림묘포에서 인력으로 불가항력인 천재가 많은 것도 포지선정을 잘못하는데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양묘기술도 중요하지만 차지료가 비싸서 싹곳을 구하다 보니 그 결과가 실패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값은 싸고 비싸고간에 적지에

묘포를 설치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묘포사업의 성패를 기술 50% 포지선정여부에 50%를 돌정도로 묘포지의 적지가 묘목생산의 성패를 가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같이 비싼 땅만 골라서 양묘하는한 차지료 압박때문에 묘목가격 현실화는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묘목가격 자체도 높아서 조립자의 부담이 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묘목가격 자체가 높을 경우 자연히 일반의 조립투자의욕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대부분의 민영양묘가 차지 양묘를 탈피하는 길이다. 생산자들이 우선 자가묘포를 확보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약 2천정보를 확보하려고 하면 1정보 확보하는데 약 1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총 2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와같은 많은 투자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고 또 생산자들이 영세한 농민이라 자기 부담이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래서 입법정책으로 산림개발기금이나 기타 장기저리자금을 10개년계획사업으로 융자해서 도마다 일정규모이상의 민영묘포를 몇군데 설치해야만 될줄 믿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묘목가격생산비에 차지료 계산을 일정한 지대(地代)로 계산할때 묘목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되어 조립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묘포사업도 기계화가 가능해서 노동집약적인 묘포업이 노동력 부족으로 두통거리가 되고 있는 점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사림묘

포종 이동묘포와 고정묘포의 장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정묘포의 경우 연작을 싫어하는 수종도 사실상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토양深耕(深耕) 심층시비(深層施肥) 미량요소(微量要素)의 공급, 객토(客土)등으로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장기저리자금으로 포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연간 1~2억원정도만 배정한다면 또 그것도 1인당 배정규모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묘포시설의 근대화는 물론 자가 포지 확보의 길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지금과 같이 생산자들이 각자 힘닿는 대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 차지를 해서 양묘를 하고 자가포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소규모씩 사방에 흩어 놓을 경우 묘포시설의 근대화 내지는 묘포 외 집약관리 지도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하루속히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도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포지를 몇군데 설정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외국에서와 같이 전천후 양묘가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장치를 하고 종묘도 우량계통을 선발 배급해서 관에서도 집중적인 지도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묘포에서 생산비의 절대비중을 차지할 부족한 노동력문제를 기계화로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하고 한수해로 오는 묘포피해를 어느정도 막을 수가 있으리라고 본다.

고정 자가묘포의 확보는 늦은감이 있다. 산림사업에서 무엇이 급하고 또 급하다해도 산림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량종묘의 생산보급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국은 일정한 규모의 자가 고정묘포 설치를 하는데 있어 연간 20억원의 임업저리자금을 배정함은 물론 이를 중요 정책사업으로 다루어 주기를 거듭 강조한다.